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15.(목)

□ 경남 기사

- 진주시청 공무원 징계 요구 펼침막 훼손 (도민일보)
 - 장애 학대 책임 묻는 게시물
- '오수관 노동자 사망' 노동계, 김해시 고발 (도민일보)
 - 노동부에 "산안법 등 위반"

홍 보 담 당 관 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가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에 대해 진주시청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펼침막이 훼손돼 정의당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정의당

진주시청 공무원 징계 요구 펼침막 훼손

장애아 학대 책임 묻는 게시물
어린이집 옹호 메모·끈 절단도
정의당 “2차 가해” 수사 요청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와 관련해 진주시청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누군가 훼손했다며 정의당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정의당은 이런 행위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시청 앞, 법원과 10호 광장에 내건 펼침막 4장이 지난 8일 훼손됐다. 진주시청 앞 펼침막 2장은 끈이 잘려 바닥에 버려졌고, 그 옆에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 ‘자폐(자페)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매일 아들에게 맞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얼마나 맞을까요. 자폐를 키워보시고 플래카드를 다십시오. 자

폐아는 돌발이 많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법원 앞 펼침막에는 매직펜으로 ‘나 ○○○어린이집 보낸 학부모예요, 내 새끼가 자폐인데 난 내 새끼한테 물리고 맞습니다. 자폐는 돌발 상황 많소, 선생님들도 학대를 받지요. 왜 현실을 모르면서 뒷북 치시요. 당신 ××가 자폐어도 이리 적을 수 있소. 난 고발한 엄마가 의심스럽소. 애를 얼마나 패면 어린이집에서 그러겠소. 제발 깊이 보시오. 정의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의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상습 장애아동 학대사건의 장애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2차 가해는 무관용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펼침막이 비슷해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은 “진주시청 앞에는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규탄하는 많은 단체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범인은 진주시청 앞의 많은 현수막 중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와 진주같이 두 단체의 현수막만 선별해서 훼손했다. 범인은 진주시에 해당 어린이집 폐원 조치를 앞장서서 요구하는 단체만 선별해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이 보는 언론 영상에 학대하는 영상이 ‘명확히’ 보도됐는데도 ‘고발한 부모가 의심스럽다’는 단어로 학대를 당한 장애인과 그 부모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자폐아동이 폭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건 일부 사례일 뿐 모든 자폐장애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진주에서 해당 어린이집 폐원과 아동보육과 간부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 정당연설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kimjh@

< 형사와 통보 >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경과

2003년 10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지정
2003~2007년	준설토 투기장 매립공사
2009년 12월	웅동1지구 최초 사업협약(창원시·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2013년 7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12월	진해오션리조트, 창원시에 확정투자비 지급조항 요청
2014년 1월	창원시, 부경대에 사업협약검토안 검토 진행
3월	사업협약 변경(확정투자비 신설)
2017년 12월	준공 전 사용허가처분(골프장 36홀)
2020년 1~4월	시행명령 3회(경자청 → 창원시 개발공사)
2022년 6~11월	정상화 협의체 구성·회의 4회(경남도 주관)
9~11월	시행명령 3회(경자청 → 창원시·개발공사)
2023년 3월 30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고시
5월	창원시, 경자청 상대 행정소송

진해소멸어업인 땅 70% 외지인에 넘어가

2000만~3000만 원 ‘딱지’ 거래
총 391명 중 120명만 권리 유지
비대위 “투기꾼 조합원 행세”
경찰 고발...조합 “문제없어”

창원시 웅동1지구 진해소멸어업인 70%가 생계대책 터 권리를 2000만~3000만 원에 외지인들에게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민일보>가 입수한 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권리 현황 문건을 보면, 웅동1지구 매립에 따라 바다를 내준 대가로 생계대책 터 권리를 받은 소멸어업인은 모두 391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리를 유지한 소멸어업인은 30.7%(12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71명은 소멸어업인들에게 돈을 주고 권리를 산 외지인들이다.

소멸어업인 권리가 매매되면서 이른바 생계대책 터 ‘딱지’ 거래가 활발했다. 외지인이 생계대책 터 권리를 사들이면서 투기판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다 매립으로 생업을 못하게 된 어민보다 외지인이 두 배나 많은 상황이 되면서다.

당시 땅의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권리를 판 소멸어업인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권리를

양도한 어업인들을 조합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소멸어업인조합 구성원 비율도 소멸어업인 30%, 외지인 70%가 됐다.

문건을 보면 진해구 남문어촌계 45명 중 권리 유지 어민은 13명, 권리 양도 어민은 32명이다. 수도어촌계 108명 중 권리 유지 어민은 23명, 권리 양도 어민은 85명이다. 연도어촌계 70명 중 권리 유지 어민은 18명, 권리 양도 어민은 52명이다. 제덕어촌계 163명 중 권리 유지 어민은 66명, 권리 양도 어민은 97명이다.

소멸어업인이 아닌 외지인 형제가 딱지를 10개나 사들이기도 했다. 외지인들도 집회에 참석해 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개발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개발만 된다면 2000만~3000만 원에 사들인 딱지의 가격이 최소 1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7000만 원 차액을 남길 수 있다. 10개 권리를 사들인다면 차액은 7억 원이다.

‘가짜 어민’으로 채워진 소멸어업인 조합을 조사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문·수도·연도·제덕 4개 어촌계 소멸어업인으로 구성된 ‘진해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진정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상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낸 진정서에서 “어느 순간부터 어민이 아닌 투기꾼들이 어민을 사칭하고 조합원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대책 조합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을 사칭한 투기꾼들이 좌지우지한다면 진해소멸어업인 조합은 정당성도 없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을 주장할 명분도 없다”며 “나아가 이들이 생계대책 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건립하고 무단 형질 변경,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를 하는 만큼 법적 고발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설립 과정 확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라 생계대책 터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됐고 권리를 산 사람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근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 자문에서도 권리를 사고파는 것은 개인 간 거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공지를 냈더니 생계대책 터 권리를 산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찾아왔다”며 “등록증 같은 증빙서류를 가져왔는데, 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소멸어업인 권리를 사고팔 때 돈을 받은 중간 브로커들이 문제”라고 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와 관련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를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지 의아하다”며 “법적으로 정밀하게 따져볼 부분이라 일단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고 있지만, 조합 측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멸어업인조합에 생계대책 터 개발 권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과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신항 건설 과정에서 사라진 어장 대신 받기로 했던 생계대책 터(22만 4800㎡) 등기 이전을 지난해 마쳤으나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발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돼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으로 한정돼 있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웅동1지구 개발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자, 창원시는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와 웅동1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 찾기도 뒤로 밀리고 있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

< 수사과 통보 >

“어업인 참여 논의기구 만들고 생계 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집회 열어
도·창원시·경자청에 구성 촉구

진해소멸어업인들이 지난 1일 경남도청 앞 집회에 이어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1지구 생계대책 터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라’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등 웅동1지구 관련 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소멸어업인이 참여하는 임의기구(협의체·조직 등) 구성을 촉구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도청에 가면 권한이 없다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때문이라 말한다”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창소멸어업인조합과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 절차를 거쳐 진해신항 건설 과정에서 사라진 어장 대신 받기로 한 생계대책 터(22만 4800㎡)를 사들였다.

문제는 이 후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만 웅동1지구 개발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지정 취소를 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였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자신들도 생계대책 터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와 개발계약을 한 민간사업자(주진해오션리조트가 개발 주체라고 판단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소멸어업인도 개발 주체가 될 수 있

다던 창원시 설명과 달랐다. 이 때문에 소멸어업인조합은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생계대책 터 매각은 결국 소멸어업인을 죽이는 영터리 행정이었다.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이행, 후속 절차를 할 수 없음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만 받아가고 있다”며 “창원시는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모든 관련 기관은 소멸어업인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소유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전이 있으려면 새 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하나, 창원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은 “시행자 지정 취소는 창원시 관리·감독 소홀 때문이다. 시는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생계대책 터 경제자유구역 제외, 새 사업시행자 선정 등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원만한 대안과 해결 방안이 도출되도록 조합을 포함한 임의기구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보면, 시·도지사가 나설 때 생계 터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남도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창원시는 소송 제기 이유로 ‘시민 피해 방지’를 들었다. 시 소유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창언 기자 un@idamin.com

< 정보과 통보 >

“정부, 정당한 노조 활동도 공갈·협박으로 몰아”

수사기관 동원 전방위 압박

노동계 간부·조합원 줄조사

“일할 여건 나빠도 쟁의 못해”

최근 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특진 인원 약 30%(40명)를 배정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만 배정된 특진 인원이 50명에서 9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특별단속 결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재판에 줄줄이 넘겨지고 있다. 부울경지부 조합원만 해도 96명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건설노조만이 아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노동 탄압에 나섰다고 항의하고 있다.

◇“과도한 법 집행 멈춰라”=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14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경남지역 노동계에 적용된 불법 혐의

〈자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외 1명(국가보안법 위반)

- 건설노조 투쟁 관련

정순복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외 15명(업무방해)

ㄱ 지회장 외 1명(임대료 담합)

ㄴ 전 간부 등 3명(협박 강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2월 23일 국가정보원 침탈 사찰 투쟁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ㄷ 민주노총 경남지부 국장 외 6명(감금치상)

- 2월 24일 국가정보원 규탄 기자회견 관련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2월 28일 국민의힘 규탄 투쟁 관련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외 11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이 가운데 1명(특수공무집행방해) 2명(폭력) 추가 혐의 적용

- 5월 3일 건설노조 검찰청 기자회견 관련

정순복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직무대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의 노동 탄압에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몰고, 노동운동에 사상과 이념적 덧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수사기관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수사기관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외 11명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1명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2명에게는 폭력 혐의까지 씌웠다. 국가정보원 규탄 기자회견(2월 24일), 건설노조 검찰청 기자회견(5월 3일)에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

다. 노동계는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수사기관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공안 탄압을 주장하면 불법집회라면서 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했다”며 “수사기관이 보이는 행태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윤석열은 자유를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돼 복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그라드는 노동자 권리** = 지난달 1일 양회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부 3지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건설노조는 양 지대장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로 봤다.

건설노조는 지난 13일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양 지대장 장례식장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는 건설노조 노동자 실

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설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은 ‘죽고싶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설노조 조합원 압수수색은 19회, 구속 19명, 경찰 소환조사만 1173건에 달했다.

이준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울경지부 대외협력위원장은 “경찰청에서 건설현장 특별단속 특진 규모를 늘리는 바람에 소환조사가 남발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느닷없이 불법으로 몰리니 다들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토로했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말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 분위기와 맞물려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는 건설사도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이주 노동자를 데리고 오면서 지역민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용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지부장(지부장 직무대행)은 “건설 현장에서 교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일할 여건이 아닌 데도 쟁의 행위를 못하고 있다”며 “외주업체들은 조합원 고용을 피하고, 이주 노동자를 위협한 현장에 고용한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정보과 통보 >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15면 사람들



경남경찰청 직장협-법무법인 YK 업무협약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14일 경남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권재훈 직장협의회장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소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 참고기사 >

慶南日報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06면 지방

거창署, 노인학대예방의날 사진 공모전

거창경찰서는 2023년 노인학대예방의날을 맞아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 인권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인학대예방 사진 공모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가족 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접수마감은 오는 18일까지며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이용구기자

< 참고기사 >

慶南日報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10면 사람



산청경찰서, 수확기 양파농가 일손돕기

산청경찰서는 지난 13일 생초면 월곡마을에서 수확기를 맞아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양파 수확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농촌 인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산청경찰서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원경복기자

< 참고기사 >



산청군 단성면 저호마을에 '안심 골목길'이 조성됐다./산청군/



산청 단성면 저호마을 '안심 골목길' 생겼다

군, 범죄·안전사고 예방 위해 조성
CCTV·가로등·도로반사경 설치

산청군은 범죄 예방 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한 단성면 저호마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저호마을 앞 군도 11호선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과속 차량으로 주택 담장이 파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골목길이 어둡고 보행자 통로 확보가 부족해 마을주민과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

고·범죄 발생 우려로 마을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총사업비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환경설계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 조성에 나섰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 구상과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지리산고등학교, 산청경찰서와 지속적인 소통·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은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이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 참고기사 >

전 건설노조부울경지부장 공동공갈 혐의 반박

첫 공판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

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수 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석 전 지부장은 다른 지회와 연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동 공갈 혐의는 반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218호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석 전 지부장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석 전 지부장이 지난해 6~8월 도내 건설 현장 6곳에서 조합원 펌프카 사용을 요구하고자 집회 개최, 공사 장비 투입 저지 등으로 작업을 막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11월 건설 현장 2곳에서 조합원 채용과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1300만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도 추궁했다.

검사가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놓자 이도현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인정하지만 공동공갈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방해는 펌프카지회와 연대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노조 전임비’가 재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 전임비는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받는 임금이다. 석 전 지부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 전임비 지급을 보장받은 상태였다. 조합원 채용과 복지기금 명목으로 받은 약 1300만 원은 사적인 용도로 쓰이지도 않았다. 공갈 혐의가 구성하려면 금전적 이득이 성립돼야 한다.

이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 적법하게 받은 노조 전임비를 갈취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임단협에서 노조 전임비 지급에 합의하고 10월에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참고기사 >

장애아동 학대 원장, 진주시의회 증인 불출석

어린이집 행감 출석 요청에
검찰 조사 이유 사유서 제출

장애아동을 학대한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장이 진주시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한 장애전담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이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출석일과 검찰 조사 등이 겹치고, 원감은 어린이집을 사직했다는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경제복지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14일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을 각각 증인, 참고인으로 나오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을 못 하는 사유서를 출석일 하루 전날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다. 이번 회기 내에 재차 출석 요구를 하기도 어렵다. 출석을 위해서는 적어도 4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복지위는 입장문을 내고 “원장과 원감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질문에 답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들의 소홀한 책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복지위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 받은 아동과 학부모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시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경제복지위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 참고기사 >

‘오수관 노동자 사망’

노동계, 김해시 고발

노동부에 “산안법 등 위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와 흥태용 김해시장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14일 고발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날 오후 “김해시와 김해시장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부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여부와 실행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도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최근 도급업체에 맡겨 오수관 준설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법 적용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 지난 8일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검찰로 넘긴 상태다. 만약 이번 법 적용이 이뤄진다면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경남지역본부는 ‘김해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범위에 하도급 적용 부분이 빠져 있었으며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김해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하도급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체를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지역본부는 김해시가 처음부터 원청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조차 규정에 넣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김해시가 원청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자체 안전보건관리의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지자체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석환 기자 csh@domain.com

“전국에 탈핵·탈송전탑 알린다”

밀양 송전탑 대집행 9주년 맞아
반대대책위, 7월부터 전국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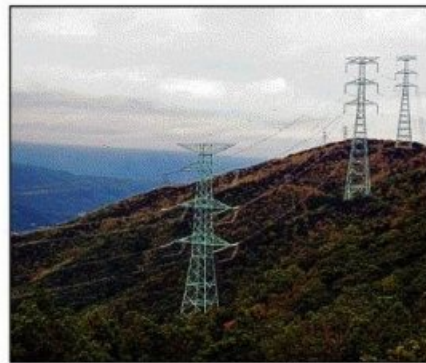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행정대집행 9년째, 반대 투쟁 18년째를 맞아 탈핵·탈송전탑을 알리고자 전국을 순회한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7월부터 탈핵, 탈송전탑을 통한 기후정의를 알리는 전국 순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탈핵·탈송전탑 취지에 동의하는 곳이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9년 전 ‘우리가 밀양이다’를 함께 외쳐주고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시민과 함께 탈핵·탈송전탑을 통한 기후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올해로 18년째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울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밀양을 지나는 송전탑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밀양시 단장면과 산외면을 지나는 철탑 전경./경남신문 DB/

2005년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 상동면 주민들이 처음으로 송전탑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2012년 산외면 보라마을 이치우씨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숨지자 전국적인 탈핵·탈송전탑 운동으로 확산했다. 정부는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으로 마지막 4개 농성장을 철거한 후 송전탑을 결국 세웠다.

그러나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시 단장면·부북면·상동면·산외면 일대 약 100가구는 한전이 주는 합의금을 받지 않는 등 여전히 송전탑 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대대책위는 밝혔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 참고기사 >

‘NO EXIT’ 마약에 탈출구는 없습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이사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남길우 경남신문 회장의 지목을 받아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정현숙 대표는 “마약은 출구가 없는 미로로, 호기심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음 주자



로 이원근 창신대 총장과 류병현 동구 기업 대표를 지목했다. 박준혁 기자

경남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11면 사람

이원근 창신대 총장

이원근 창신대학교 총장은 지난 12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원근 총장은 “최근 마약이 학생들에게까지 파고드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번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대학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다음 주자로 창신대학교 배종



갑 총동창회장과 홍정기 총학생회장을 지목했다. 박준혁 기자

경남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11면 사람

배종갑 창신대 총동창회장

배종갑 창신대학교 총동창회장(대도산업주 대표이사)이 지난 13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배종갑 회장은 “마약이 학생들에게 침투되는 현실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은 국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범죄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약 퇴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



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慶南日報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10면 사람



최수경 하동교육장, 마약 예방 캠페인

최수경 하동교육장은 지난 13일 마약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윤관기자

경남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011면 사람

김종찬 의령소방서장

김종찬 의령소방서 서장이 지난 13일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참여했다.

김종찬 서장은 "최근 사회 곳곳에서 마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 소방서에서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김명현 기자

덴소, 한국와이퍼 노동자 권리 보호해야

한국와이퍼의 회사 청산으로 발생한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가 보호 받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13일 마산에 있는 덴소코리아 본사 앞에서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 중단, 3차 일본 원정 투쟁 발대식, 덴소코리아 성실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회사 청산 과정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쟁을 선언하는 결의대회나 마찬가지이다.

덴소코리아는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인 덴소가 현대·기아차에 와이퍼를 납품하는 한국 현지 계열사이며,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자동차 와이퍼를 생산해 덴소코리아를 통해 납품하고 있었다. 덴소와이퍼시스템은 한국와이퍼의 본사이다. 자동차부품 와이퍼 생산을 중단할 리가 없는 기업이 노동자 승계 약속도 없이 기업을 청산한 것인데, 이러한 결정은 모기업 덴소와 덴소코리아, 덴소와이퍼시스템이 향후 벌어질 사태를 잘 알면서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덴소코리아와 덴소와이퍼시스템은 2021년 고용안정협약서에 연대보증 서명을 하여, 한국와이퍼 노동자 고용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2022년 7월 청산과 희망퇴직을 발표했으며 지난 1월 이후 실제 청산이 진행됐다. 불법 대체생산 금지 약속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회사의 청산 후 설비 무단반출 행위가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사용자가 설비를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 중단 결정은 자본의 특권 중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청산 과정에서 배당과 임금 지급 등에 무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의 특권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서는 사회가 위험해진다. 노동자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 노동부, 경찰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노사 간 합의와 같은 중요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09명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자본 활동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노동자 없이 가능한 산업은 없다.

곳곳서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15일 부산 울산 경남에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6월 15일 (음 4월 27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30	60	60	60	3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흐리고 비	흐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흐리고 눈

	해돋이/해짐		달돋이/달짐
	05:09 19:40		02:45 16:57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6:12 18:42	12:10 -
인천	02:31 14:44	08:49 21:03
포항	03:24 13:03	06:56 21:14
통영	06:37 19:20	00:27 12:41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북서-북	4-7	0.5-0.5
남해동부	북동-동	3-7	0.5-1
동해남부	남-남서	4-6	0.5-1
동해중부	북-북동	4-8	0.5-1
서해중부	남-남서	2-5	0.5-0.5
서해남부	북서-북	4-7	0.5-0.5

주간날씨

	16(金)	17(土)	18(日)
부산	20-27	21-28	21-27
울산	18-28	20-31	19-29
진주	17-30	18-32	18-31
김해	19-29	20-30	20-29
창원	18-29	20-30	20-30
통영	19-27	20-27	20-27
대구	19-31	21-33	22-32
세종	18-31	20-32	20-32
서울	19-29	20-30	21-31
제주	19-26	20-27	20-26